

# 일제의 민족동화정책 개관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

서문

일제시대 35년간에 걸친 피지배민족에 대한 일제의 민족정책은 1945년 8월15일 연합국에 대한 일제의 무조건항복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즉 일제의 항복은 전쟁에 패배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광복을 맞이한 조선에서의 민중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해방만세’를 외친 일로 상징되듯이 일제의 식민지 민족정책 자체가 실패였음을 뜻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가 조선 등을 지배하기 위해 사용한 민족정책을 동화정책(同化政策)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그 현대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로 삼는다.

## I. 민족동화정책의 배경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은 메이지(明治)시대부터 이미 조선 지배를 주된 목표로 하는 가운데 태동되었고 점차 그 틀을 형성해 나갔다. 국학(国学)적 전통을 가진 에도(江戸)막부 말의 존왕양이(尊王攘夷)사상의 대두는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의 조선침략론<sup>1)</sup>으로 대표되듯이 일본의 조선침략을 주장함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메이지정부가 존왕양이파를 중심으로 출범함에 따라 조선 침략적 논리는 형태를 달리하면서 항상 메이지정부의 중심부에 자리 잡게 되었다.

조선침략에 대한 일본의 야심은 그 후 일본군부가 이어갔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면밀한 답사조사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광개토대왕비(廣開土大王碑)를 발견해 그 탁본을 일본으로 반입했다. 그 다음 그 비문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고대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역사를 왜곡시켜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점령을 ‘임나일본설’로 억지로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당시는 일본의 고전인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진구(神功)황후의 삼한토벌신화와 군부에 의한 광개토대왕비 비문 왜곡으로 인해 조선은 고대로부터 일본의 속국이였다는 침략의 구실에 대한 허공의 논리가 만들어졌다.

또한 일본의 민간에서는 조선사회가 진보하지 않는 정체사회라는 논리<sup>2)</sup>가 등장하여 일본에 의한 조선의 문명개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했다. 즉 고대에는 일본

1) 요시다 쇼인은 조선침략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병법(兵法)에는 먼 저 큰 소리치고 나중에 결실을 맺는 법이 있다. 지금 대대적으로 선함(船艦)을 건조하여 북쪽에서 에조(蝦夷=홋카이도)를 손아귀에 넣고, 서쪽에서 조선을 정복하고 재빨리 진취(進取)의 기세를 보여주면 군이(郡夷=서양 열강)가 스스로 손을 놓을(=일본 침략을 포기할) 것이다.”(吉田松陰, “兄杉梅太郎宛書簡<安政元年12月12日>”, 『日本思想体系54』 p.171, 岩波書店, 1978)

2) 정체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 후쿠다 토쿠조(福田徳三:1897-1930)가 있다. (『한국사 시민강좌』 創刊号, p.23, 일조각, 1987.)

의 속국이었던 조선은 이제 중국과의 오랜 관계를 끊고 다시 일본의 지배, 지도하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갔다.

1895년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제는 대만을 영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청일전쟁 자체가 조선의 영유 쟁탈을 놓고 치른 전쟁이었으므로 일제는 대만에 대한 지배를 확실한 방침 없이 시작했다.<sup>3)</sup> 그러므로 대만지배의 정책의 큰 흐름은 우선 치안의 유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대만에 대해서는 초기에 동화정책으로서는 일어교육이 소규모로 실시되었을 뿐이었다.

이어서 1905년 러일전쟁을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하는 데 ‘성공’했다. 일제는 같은 해 11월 을사보호조약(을사늑약)을 강요하여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했고 군사, 외교권을 장악, 내정간섭을 시작했다. 통감부는 한국의 교육에도 간섭을 시작했고 한민족 동화정책의 기초를 닦으려고 했다. 이 시기는 한국을 일본에 지배하에 두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구축되는 시기였다.<sup>4)</sup>

## II. 무단정치기의 동화정책(1910-1919)

1910년 8월29일, 「한일병합조약」 반포로 대한제국은 일본 지배하에 들어갔다. 국가라는 뜻을 없애기 위해 일제는 그때부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부터 「조선」으로 바꿨고 「황제」는 「왕전하」로 격하시켰다.<sup>5)</sup> 이렇게 하여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지배가 시작되었다.

1910년에서 1919년 3.1독립운동이 시작될 때까지는 소위 「무단통치」로 불리는 압박통치가 강행되었고 정책으로서는 ‘치안확보’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이 시기 조선에서의 민족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었던 것은 「반대와 숙청정책」이었다. 그것을 총독부는 「치안의 유지」와 「생명재산의 안고(安固)」라는 말로 표현했고 이것이 “제1의 요체”라고 자리매김했다.<sup>6)</sup>

“병합의 중국적 목적은 물질적으로 조선민중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신력의 동화(同化)를 도모하여 내선일가(內鮮一家)의 실적을 올리는데 있다”<sup>7)</sup>고 하여 일제는 「교육정책」을 추진했는데 초기의 교육정책은 실업주의(實業主義)의 미명 하에 실시된 ‘차별교육정책’이었다.

일제는 일본본토(내지)에서는 소학교 6년제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보통학교 4년제를 실시했고 아울러 조선인에 대해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장려하지 않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또한 교과목에서도 일어와 수신(修身)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서 좁은 범위 내에서의 동화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3) 윤건차, 『近代日本の異民族支配』, p.85.

4) 민간에서는 ‘아시아주의’가 대두되었고 서양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한중일연대론’,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보고 아시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기 되어야 한다는 ‘일본맹주론’,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방하여 ‘대동(大東)’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한일합방론’ 등이 거론되었다. 또한 겐요샤(玄洋社), 코쿠류카이(黒龍會) 등이 결성되어 일본에 국익을 위해 아시아 각국의 혁명운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5) 小松綠, 『朝鮮併合之裏面』, p.155, 中外新論社, 1920.

6) 『施政二十五年史』, p.24.

7) 상계서, p.25.

이 시기는 1905년부터 병합까지의 통감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교사를 통한 교육현장의 장악이 행해졌고 일본인교사가 조선 각지를 순화하면서 사회적 지도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사회 전반을 보면 1919년까지 조선에 대한 정책은 대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없고 치안정책과 차별정책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시기의 기타 특징으로서는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한 일제 지배에 대한 반대자 탄압, 「민생 향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해진 의료기관 설치, 철도와 도로 개선 등 각종 복지정책과 각종 산업 흥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초기 10년간의 민족정책으로 민심을 잡을 수 없었고 보통교육도 차별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 그 결과는 3.1독립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의식<sup>8)</sup>과 조선적인 것을 모두 부정하려는 사고방식이 총독부 내에서 강했다. 그런 일제의 오만성도 3.1독립운동에 힘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계 학교보다 사립계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sup>9)</sup> 사립학교 내에서의 민족교육과 일제의 탄압정책이 충돌하여 이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 원칙 발표가 기폭제가 되어 3.1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 시기 일제는 일본본토로부터 조선에 대한 이민을 장려했다. 이 이주정책은 ‘잡거정책’이라 불리는 동화정책의 하나의 수단이다. 1908년12월에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16년까지 7번에 걸쳐서 조선에 대한 일본인 이민을 실시했고 조선에서의 일본인 이주민의 총수는 3,074호 1만3,800여명에 달했다.<sup>10)</sup> 총독부가 작성한 『시정25년사(施政二十五年史)』에서는 이런 초기 이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이민 초래(招來)는 그 주변에 사는 조선인의 각성을 촉진하고 내지인(內地人)의 신규이주를 유발하며 기타 제반의 사회적 설비도 설치되므로 지방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회사는 더욱 그 보호를 증진시켜 이민의 초치(招致)에 보다 많은 성적을 올리는 일을 기한다.<sup>11)</sup>

8) 일본인의 조선인 멸시의식 :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한일병합은 양 국가의 합체이지만 일본은 主動者이고 조선은 受動者이다. 그래서 양자간에 等差가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② 조선은 2천년 전부터 중국에 속해 있고, 일본에 종속되었던 시대도 있었다. 완전한 독립을 아직 이룬 적이 없었다. ③ 일본은 고대로부터 독립국이다. 중국에 속해 온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하에 있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④ 조선고대의 문화는 찬양할 만한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퇴보하여 볼 것이 없다. ⑤ 조선인은 빈곤했는데 이것을 오늘의 생활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은 일본 덕분이다. ⑥ 惡政 탓인지 조선인에는 도덕상의 결함이 많다. ⑦ 조선인은 사대사상이다. 이것이 자주자립의 자격이 없다는 증거이다. (加藤房藏, 『朝鮮騷擾の真相』, pp.6~7, 京城日報社, 1920)

9) 1915년에 통계로는 일본이 세운 보통학교는 397교, 사립학교는 1207교, 서당은 21358개였다.(梅根悟, 『朝鮮教育史』, p.265, 講談社, 1975)

10) 『施政二十五年史』, p.97.

11) 상계서, p.97.

즉 이주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의 각성을 촉진” 하도록 기대되었다. 이주정책은 다수의 일본인들을 조선인들과 ‘잡거(雜居)’시켜서 조선인들을 감화, 교화시키는 동화정책의 하나의 형태였다.

이 시기 일제는 주요대학에 식민학과를 설치해 서양의 식민지 정책을 연구하게 했다. 니도베 이나조(新渡戸稻造)와 야나이하라 타다오(柳内原忠雄)는 대표적인 일본의 식민학자다. 그들은 소위 ‘식민지 선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연구하였고 영국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는 무력통치, 자치주의 등을, 프랑스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는 동화정책, 내지연장주의, 결혼정책 등을 그 특징으로 지적해 일본의 대만, 조선 지배에 조언을 했다. 그들은 조선을 인도와 같은 자치식민지로 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시기,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기초 이념이 만들어졌다.

### III. 문화정치기의 동화정책(1919-1931)

1919년 3.1독립운동이 터지자 일제는 세계 각국의 눈을 의식하여 일시동인(一視同仁)과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를 내세우면서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는 되풀이해서 말했듯이 식민지관계는 아니다”<sup>12)</sup>라고 강변하기 시작했다. 이 주장은 이면성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목표로 한 것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로 특히 조선에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기운이 생겼기 때문에 조선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 자체라고 강변함으로 조선의 독립운동을 좌절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서양선진국들에 대한 면목 상 조선과 대만에 대해 일본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필요가 생겼다. 그러므로 조선과 대만에서는 문화정치가 시작되었다. 언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령을 개정하여 일본본토의 교육제도와 거의 똑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10년대는 차별교육을 전제로 제도를 만들었으나 이 시기는 학교제도를 일본본토의 제도와 거의 똑 같이 만들어 갔다. 그러나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상 조선에서 동화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일제는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을 동화시켰을 때 「홋카이도 구 토인 보호법(北海道旧土人保護法)」을 제정하여 아이누족의 동화를 촉진시켰는데 그때는 “내지잡거(内地雜居)” 정책으로 아이누족과 일본인들을 홋카이도 내에서 잡거시키는 것을 통하여 아이누족의 동화를 촉진시켰다.<sup>13)</sup>

그러나 2,000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조선에서 아무리 일본인들이 이주해도 잡거에 의한 동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조선인의 동화는 “교육”을 통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1919년까지는 일본 내에서도 조선인 동화에 대한 의식이 강하지 않았고 총독부도 동화정책을 입으로만 했을 뿐 사실상

12) 加藤房藏, 전게서, p.97.

13) 조정남, 『日本民族問題』, pp.132~135, 教養社, 1999.

차별적 억압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3.1.독립운동이 일어난 동화주의 사상을 가진 하라 타카시(原敬)가 일본수상이 된 후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대한 동화정책이 법적인 개념을 갖고 추진되었다. 3.1독립운동 후에 교육을 제도적으로 일본의 제도와 거의 똑 같이 만든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조선인을 교화하는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전혀 알 수 없으며 물론 그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 해결은 교육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sup>14)</sup>. 이런 사이토 총독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교육만이 조선인 동화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제가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동화정책으로서 교육을 중시한 일제는 일본 본토와 거의 같은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교과목 내용에는 동화주의적 경향을 강화시켰다.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사와 일본지리 과목이 추가되었고 조선사와 조선지리는 일부만을 가르치게 했다. 그리고 역사교육에서 ‘일선동조론(一鮮同祖論)’이 강화되어 일본의 시조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의 남동생 신 수사노오(素戔鳴尊)가 조선의 시조 단군(檀君)이었다는 이야기가 학교와 사회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즉 원래 남매였던 한국과 일본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한일병합 정당론으로 이런 신호들이 이용되었다.

총독부는 3.1독립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 종교단체와 사립학교를 지목했다. 총독부는 병합 직후부터 사립학교에 대한 설립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1912년 1,362교(종교계: 545교, 일반사립: 817교)였던 학교 수는 1920년 690교(종교계: 260교, 일반사립: 430교)<sup>15)</sup>가 되었고 종교계 사립학교는 47.7%로 일반사립학교는 52.8%로 격감했다. 1930년에는 그것이 더욱 감소했고 전체 424교(종교계: 182교, 일반사립: 242교)로 줄었고 종교계 사립학교는 1912년에 비해 33.4%, 일반사립학교는 29.6% 까지 줄어들었다.

	사립학교 총수	종교계 사립	일반 사립
1912	1362	545	817
1920	690	260	430
1930	424	182	242

사립학교수의 추이(『朝鮮教育史』, p.259 )

그리고 총독부는 공립보통학교 확충을 위해 서당을 사설학술강습회로, 사설학술강습회를 사립학교로, 사립학교를 사립보통학교로, 사립보통학교를 공립보통학교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sup>16)</sup> 일제는 이런 식으로 치안 대책과 민족사상 대책 그리고

14) 尹建次, 전계서, p.95.

15) 梅根悟, 전계서, p.259.

16) 상계서, p.261.

보통학교 확충계획을 한꺼번에 진행시켰다.

조선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립보통학교를 확충하여 동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화정책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리고 조선의 성인들에게는 원래 일본인을 되도록 많이 조선으로 이주시켜서 조선인과 함께 잡거하게 만들어서 조선사회를 일본으로 동화하려는 계획이 일본의 민족정책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되도록 많은 내지인을 반도로 이주시켜서 조선인과 잡거 혼주 하도록 하여 서로 돕고 서로 일하면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므로 내지인이 100만이든 200만이든 많이 이주 할수록 좋다.<sup>17)</sup>

그러나 그런 정책에 대해 식민지정책 학자인 야나이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다수의 조선인을 만주에 이주시키고 그 빈자리에 일본인을 이식하는 것을 통하여 이것(조선)을 내지인 사회화하려는 것 따위는 공상에 그칠 것이다.<sup>18)</sup>

야나이하라가 “공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듯이 사실상 외지에 대한 잡거정책은 이주자가 많지 않아서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

일제는 조건에 맞는 해외 이주자에게 장려금으로 1호당 300엔을 교부했다. 소위 양질의 이주자에게 주어진 이런 장려금을 받고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 농업이민자는 1927년(쇼와2)까지 132호였고, 1933년(쇼와8)까지는 695호였다. 그러나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한 이민은 1928년(쇼와3)에 폐지되었다. 그 이유는 일본인 이주민들이 조선인 소작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난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1927년까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하여 17회에 걸친 이민이 실시되었고 이민호수는 9,104호였다.

이 시기에 일제는 조선에 대한 이민정책을 소극적 방향으로 바꿨다.<sup>19)</sup> 즉 야나이하라가 지적한 대로 이민을 통한 조선사회의 일본화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고 만주사변 이후 새로운 이주지로 만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조선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정책으로 친일인사를 만드는 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조선인들이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일류 인물들을 친일인사로 만들지 않으면 조선 민중에 대한 교육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일제는 먼저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3.1독립선언문을 쓴 최남선(崔南善), 2.8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이광수(李光洙), 독립운동의 추진역할을 한 최린(崔麟) 등이 포섭되었다. 3.1.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들을 전향시켜 친일인사로 변신하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남선은 다음과 같

17) 加藤房藏, 전계서, p.93.

18) 矢内原忠雄, 『植民政策の新基調』, p.348, 弘文堂書房, 1927.

19) 『施政二十五年史』, p.398.

이 조선민중의 존경심을 받는 인물이었다.

씨(=최남선)는 메이지 23년(1890) 경성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신동이라 불렸다. 잠시 와세다(早稻田)에 유학한 적이 있으나 오늘날의 박식은 거의 독학 자습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중략) 그 박식과 웅변력은 청년들의 숭배대상이 되어 있다. 또 조선고서를 5만 권이나 소장한다고 하여, 조선인 사이에서 최대의 장서가(藏書家)이기도 하다. 요즘은 계명클럽에서 조선고서 간행에 종사하고 있고 동아일보 객원으로 가끔 논설을 맡는다. 씨가 다이쇼8년(1919) 소요사건의 선언서 기초자라는 것은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sup>20)</sup>

이처럼 최남선은 조선 청년들의 숭배 대상이 된 만큼 그 시대 조선에서 초일류의 인사였다. 일제는 이런 인물을 친일인사로 변신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런 일제의 친일인사 육성책으로 인해 많은 친일단체들이 생겨났다. 친일여론 조성을 위한 친일단체로서는 교풍회(喬風會), 국민협회, 대동동지회(大東同志會) 등이 있었고 대지주와 예속자본가들의 친일단체로서는 대정친목회(大正親睦會), 유민회(維民會) 등이 있었다.<sup>21)</sup> 기타 여러 분야 여러 계층에서 친일단체들이 많이 결성되었다.

즉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의 「문화정치」 시대는 학교교육을 통한 동화정책과 친일인사를 통한 사회적 동화정책을 중심으로 일본의 민족동화정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조선인들의 마음을 잡고 조선인 사회에 파고들기 위해 조선주재 일본인들에게 조선어 강습과 자격부여를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현재 알려진 일제의 조선어 정책으로는 일제시대에 조선어는 점차 폐지되어갔고 주로 일본어 학습만을 강요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제는 문화정치시대에 재조선 일본인에게는 정책적으로 조선어 학습을 강화시켰다. 1921년(다이쇼10) 5월 총독부는 조선어 장려규정을 발표하여 일본인 관리들에게 조선어 시험을 치르게 하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총독부는 시험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누어 합격자에게는 월 5엔에서 20엔까지 수당을 지급했다. 합격자수는 1921년에는 560명이었으나 1926년에는 2,725명으로 늘어났다.<sup>22)</sup>

이런 일본인의 조선어 학습은 조선인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학습했는데 이 정책도 조선의 민심을 잡으려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동화정책의 일환, 잡거정책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선인들과 접촉하는 조선인 지방관으로 하여금 일본 본토 사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1920년 5월 조선인 참여관과 군수 계 32명, 10월에는 조선인 여교사 16명, 11월에는 중추원 찬의 및 부찬의 12명을 일본 본토로 출장 시찰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조선인의 일본본토 시찰을 장려하여 각도(道)에서 시찰단을 조직한 곳도 적지 않았다.<sup>23)</sup>

20) 朝鮮思想通信社, 『朝鮮及朝鮮民族』, p.370, 1927.

21) 김운태, 『日本帝國主義の韓國統治』, pp.256~263, 博英社, 1986.

22) 『施政二十五年史』, pp.324~325.

이런 정책은 조선인 성인들 특히 주요직에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동화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제 식민지 지배를 피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 땅으로 유입되어 왔다. 특히 조선과 접하는 간도(間島)지역에는 많은 조선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일본으로서 이 지역은 사상적으로도 복잡했고 치안 상으로도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만주, 특히 간도문제는 조선전체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일제는 판단했다. 거기에 미국이 간섭할 기미를 보였고 중국 국민들도 일본의 권익을 철회시키려고 반항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본 관동군은 독자적으로 군대를 움직여 1931년 만주사변을 감행해 괴뢰 만주국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부터 간도문제를 잘못 취급하면 조선지배도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일제는 만주문제란 조선문제라는 인식 하에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정책을 써 왔다.

- ①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보조해 주고 조선인들의 자작 농가를 늘렸다. 1934년까지 1370호가 자작농이 되었다.
- ② 재외 조선인 교육시설을 보조해주었다. 1933년에는 만주전체에 472교, 아동 수 3만 8,546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③ 만주 각지에 진료소를 설치했다. 1933년에는 42군데가 되었다.
- ④ 간도에 농업기술자 10명, 수의(獸醫) 6명을 파견하여 농업, 축산 기술 지도를 담당시켰고 다른 지역에도 6명의 농업 지도자를 파견했다.
- ⑤ 만주 각지에 거주하는 지도적 조선인들에게는 조선어의 매일신보(每日申報)나 월간조선 등을 무료로 배부하여 조선내의 여러 사정을 알렸다.
- ⑥ 내지(일본본토)와 조선을 시찰하는 시찰단을 구성하여 매년 30-300명 정도 시찰 여행을 하는데 보조를 했다.<sup>24)</sup>

만주문제가 조선의 치안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제는 만주거주의 조선인들에 대해 위와 같이 각별히 신경을 썼다. 만주사변은 그런 치안문제를 의식한 관동군의 독자적 행동이었다. 관동군 참모였던 이시와라 칸지(石原莞爾)는 “조선의 통치는 만몽(滿蒙)을 우리 세력 하에 두는 것으로 하여 비로소 안정시킬 수 있다”<sup>25)</sup>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지배문제와 연결되는 만주에서의 조선민족 문제는 일제가 필연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문제는 일제 중앙에서는 이런 관동군의 독자적 행동을 처벌하지 않았고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의 모든 행동을 주인한테서 비롯했다. 군부가 상부의 명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행동하여 가령 성과를 올렸다 해도 법적으로 주동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당시 일제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군부에 대한 공포심에서였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의 행동을 비판한 당시

23) 상계서, pp.325~326.

24) 상계서, pp.965~982.

25) 윤건차, 전계서, p.102.



의 일본수상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를 관동군 장교들이 도쿄에서 사살한 1932년 5월15일의 5.15사건을 봐도 일본의 온 국민들이 군부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국제연맹은 조사단을 구성해 일제의 만주국 건국을 ‘침략’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반발한 일제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서양선진국들과 대립하는 길을 택해 버렸다. 그 결과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도발하여 일제의 패전이라는 순서였다.

#### IV. 내선일체기의 동화정책(1932-45)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1932년부터 조선에서의 민족동화정책은 「내선융화(內鮮融和)」의 강화였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공립보통학교 1면1교 체제가 거의 확립되었고 관공립 보통학교가 합계 2,017교(학생 수 약64만명)로 늘어났다. 그러나 취학을 못하는 아동들이 77%나 되었기 때문에 보통학교 감독 하에 간이학교를 설립했다. 간이학교는 2년제로 했고 입학연령을 만10세로 하여 일어의 습득과 농업 실습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sup>26)</sup> 간이학교는 1934년 5월말에 384교, 학생 수는 17만669명이 되었다.<sup>27)</sup>

참고로 1930년, 1934년, 1938년까지의 통계로 일어를 이해하는 조선인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총수	약간 이해하는 자	보통회화 이상
1930	1,627,136(7.7%)	997,423(4.7%)	629,713(3.0%)
1934	1,690,880( 8.2%)	857,268(4.2%)	833,612(4.0%)
1938	2,717,807(11.8%)	1,326,269(5.8%)	1,391,538(6.0%)

출처: 『施政二十五年史』附表 p.9.; 『施政三十年史』, p.454, p.824.(%는 인구를 1930년; 2100만, 1934년; 2050만, 1938년; 2300만으로 본 인구에 대한 비율을 필자가 계산한 것)

위의 표를 보면 일어를 이해하는 조선인수가 의외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합 이후만을 고려한다면 1910년에서 1938년까지 29년간의 일어교육의 결과로서 일어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조선인을 만드는데 총인구의 11.8%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일어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부터는 「내선일체(內鮮一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중일전쟁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일본내지와 조선을 제국의 중핵으로 삼은 일본은 조선을 완전 동화시켜 전쟁의 「병참(兵站)기지」화를 꾀하려는 계획<sup>28)</sup>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통한 동화교육과 친일인사를 통한 사회적 동화교육에 한정되어 있던 동화정책을 조선사회의 구석구석까지 확대하는 정책이

26) 『施政二十五年史』, p.897-p.899.

27) 상계서, p.904.

28) 朝鮮總督府情報課, 『新しき朝鮮』, p.1, 1944.

시행되었다. ‘황민화(皇民化)정책’이라고도 불리는 이 동화정책의 본격화는 조선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만주사변과 마찬가지로 중일전쟁도 중앙의 명령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관동군의 독자적인 전쟁도발로 인해 시작되었다. 이때 관동군 장교의 입장에서 도쿄의 육군참모본부의 간부가 된 이시와라 간지는 자신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후배들이 중앙을 무시하여 중일전쟁을 일으켰다고 알게 되어 절망했다고 후에 술회했다. 이때도 일제는 관동군의 중일전쟁 도발을 추인했다. 그리고 중일전쟁 도발로 일제의 조선과 대만에 대한 식민지정책에 지대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당시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1940년 「국민총력 조선연맹」 등의 관제조직을 만들었고 “내선일체의 철저화와 조선반도 동포의 황국신민화를 최대 선결의 목표”로 삼았다. 미나미는 연맹의 총재가 되어 선두에 섰는데 이런 연맹들은 공공기관과 거의 연결되어 있었다.

내선일체의 완성을 목표로 총독부는 일본의 코쿠타이(國體)<sup>29</sup>관념을 명징(明徵)하게 하기 위해 조선 전국에서 조선인들에게 아침의 궁성(宮城) 요배(遙拜), 국기 게양, 신사참배 등을 강제로 시행시켰고 황국신민의 서사(誓詞)를 조례, 의식, 행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낭송시켰으며 정오에는 목도를 시켰다. 그리고 내선일체의 이념을 철저화하기 위해 ‘내선일체의 역사’를 강조하여 ‘내선일체 사실(史實)’을 재인식시켰으며 일어교육을 강화시켰다.

친일인사들이 대거 동원되어서 소위 내선일체의 필독서들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동화를 목적으로 한 민족개조론이 활발하게 대두되었고 친일인사들이 일본인으로 동화하기 위한 모범적인(?) 견본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선동조론’을 근거로 내세워 조선인의 본연의 모습은 유교가 침투된 현재 조선인의 모습이 아니라 고대의 일본과 마찬가지로 신도(神道)를 신앙했고 두 나라는 원래 같은 모습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일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조선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조선의 부활을 위해 가야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조선인들 중 일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숫자가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그런 내선일체의 이념을 이해시키도록 일제가 아무리 힘을 써 봐도 조선인 전체를 세뇌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언어정책과 동화교육의 실패가 결국 일제의 조선인 민족정책 실패로 이어져 갔음을 알 수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선동조론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동화이념 속에 모순이 존재했다. 그 논리를 부정하는 학자들이 일본 본토에서 그리고 조선에서도 나왔는데 조선에서는 최남선 같은 인물이 근본적인 반대 입장에서 있었다. 그런 반대자들의 이념이 일체의 동화이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놓았고 동화정책에 혼선을 초래시켰다.

전쟁의 장기화를 예상한 일본은 조선사회에 씨(氏)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성명을 씨명(氏名)으로 바꿔서 일본식 씨명을 가진 조선인을 전쟁터에 보내려고

29) 코쿠타이(國體) :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 존재하는 신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일제의 국가체제를 가치킴.

했다.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조선에 일본식 집(家)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식 혈통제도를 부정하고 조선인 각 가정을 천황가라는 종가(宗家)와 연결시킨다는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유형무형의 압력 하에 조선인의 약 80%가 6개월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창씨개명을 마쳤다.<sup>30)</sup> 그런데 이 정책에서 「사법상의 내선일체의 완성」을 일본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그 실체는 호적 속에 조선인의 원래의 성과 본관을 그대로 남기도록 기재하는 방식이어서 결국 계속 신분을 관리하려고 한 일체의 기만적인 차별 고정화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

#### <만주에 대한 동화정책>

만주사변 후 만주국을 수립한 일본은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손문(孫文)의 권위를 빌려 일시적으로 왕도주의(王道主義)로 결정했다. 그것은 만주국 건국을 역성(易姓)혁명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1933년에는 일찍부터 황제 부의(溥儀)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건국 신으로 받아들였고 일만일여(日滿一如)라는 슬로건 아래 만주국에서도 동화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즉 이후 만주국은 왕도주의를 사실상 변형시켜 일본의 황도주의(皇道主義)를 받아들였다.

만주의 식민지 정책을 조선의 연장선상으로 본 일본에서는 고대 만주국가인 발해(渤海)가 일본의 조공국이었던 만주속국론이 대두되었고 만주민족과 일본민족은 동족이라는 ‘일만동족론’이 나돌기 시작했다. 즉 조선에서 썼던 동화이념과 유사한 동화이념을 만들어 만주국의 동화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고 했다.

한편 일본본토의 과잉인구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쓴 일본은 서구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배일운동 때문에 해외 이주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만주방면에 이민이 장려되기 시작했는데 그 때 강조된 것이 「민족협화(民族協和)」이념이었다. 그것은 만주국에 사는 일(日), 한(漢), 조선(朝鮮), 만(滿), 몽(蒙)이라는 5족을 비롯한 여러 민족을 규합하는 이념으로 주장되었는데 일본민족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을 모국으로 생각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는 일본민족에 의한 지배이념, 바로 동화이념이었다.

그러나 만주에는 당시 일본인이 25만명 정도밖에 살지 않았고 조선민족은 100만 이상, 중국민족은 3000만을 넘는 상태여서 사실상 일본의 만주지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본인들의 이민도 부진했고 일본은 결국 제국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만주국의 경영을 계속했던 것이다.

#### <조선인의 참정권문제>

일본내지에서는 조선이나 대만에 대한 참정권 부여 여부를 둘러싸고 3.1독립운동 후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입장은 조선, 대만을 식민지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일시동인(一視同仁), 내지연장주의(内地延長主義)로 일관되었다고 할

30) 1941년말에는 氏設定 戶數가 322만693호(81.5%)에 달했다.(『新しき朝鮮』, p.78)

수 있다. 즉 그것은 조선이나 대만의 민도(民度) 향상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기에 이것을 일본본토로 편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소위 조선의 홋카이도(北海道)화, 혹은 규슈(九州)화, 시코쿠(四国)화라고도 하는 법적인 민족성 말살정책이었다.

조선의 친일단체인 국민협회가 처음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중의원의원에 당선된 박춘금(朴春琴)의원이 추진했던, 조선에서의 중의원의원선거 실시운동은 일본 측의 경계심으로 인하여 쉽게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정부는 중의원선거가 조선에서도 실시되고 조선인의원이 본토의 제국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제국의회에서 그런 소수의 외지(外地)의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sup>31)</sup> 그러나 1938년 조선에서 지원병제도가 실시된 후 1944년부터 징병제가 실시됨에 따라 조선인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1945년 4월에 마침내 제한선거실시가 결정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내외지(内外地) 법역(法域)을 폐지하고 조선과 대만을 내지로 완전히 편입시켜 내지연장주의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피력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조선총독으로 재임기간 중 조선인의 징병제실시를 강력히 추진시킨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일본수상으로 취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고이소는 조선인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전략) 그러나 내선 또는 내선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별을 제거한다는 것은 먼저 그것에 앞서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즉 조선동포가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어 버리는 것이 선결 문제입니다.<sup>32)</sup>

즉 그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차별을 제거하는 노력을 조선 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부각된 문제가 징병제문제였다. 그는 징병제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략) 그런 동향 하에 조선에 있어서 차차 여러 제도의 개선을 했고 이제 내선 사이에 잔존하는 여러 차별이 점차 제거되어 가는 도정(道程)으로 접어들었는데 여기에 쇼와19년(1944)도로부터 조선동포에 대하여 징병제도를 실시한다는 가장 획기적인 방침이 결정되어 참으로 기뻐하는 인심(人心)의 향상과 발전이 진전되었습니다.<sup>33)</sup>

즉 고이소는 징병제 실시가 일본과 조선 간의 차별철폐의 가장 큰 조건이 되었다고 하여 1944년 7월에 일본수상이 되자마자 조선에서의 중의원선거법 시행과 일본과 조선의 법역 통일(法域統一) 문제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조선은 일본 본토 완전 편입 직전에 광복을 맞이한 셈이다.

31) 최유리, 『日帝末期 植民地支配政策研究』, p.260, 国学資料院, 1997.

32) 高宮太平編, 『小磯統理の展望』 第1輯, p.131, 京城日報社, 1943.

33) 상계서, p.133.

## V. 결어를 대신해서

일제가 공언하듯이 일제의 외지경영의 기초는 동화정책과 내지연장주의였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이 두 가지는 일제의 중심적인 민족정책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구별하는 두 용어인 것이다. 즉 동화정책은 조선인을 비롯한 외지인을 일본인화하겠다는 정책이고 주로 잡거와 동화교육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대해 내지연장주의란 일본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외지에 시행한다는 법제적인 개념이어서 동화정책의 진전에 따라 실행되는 정책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제가 조선인의 민도(民度)가 낮다고 한 말은 조선인의 동화수준이 낮다는 뜻을 내포한 말이었다. 즉 민도에 따라 일본 본토의 법제도를 조선에 시행한다는 것은 외지인의 동화수준에 따라 내지연장주의에 의한 본토의 법 시행을 하겠다는 뜻이었고 이것이 일제의 기본방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인의 민도가 낮다’는 말은 일본의 법제도를 전면적으로 조선에 시행하기는 이르다는 뜻으로 차별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일제는 30~40년 전에 일본본토에서 시행된 구법을 주로 조선에 시행하는 수법을 사용해 법적인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일본본토와 조선, 대만이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법역이 된다면 이제 조선인이나 대만인 위에 일본인이 군림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었다.

###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추이>

일제는 유구왕국의 유구인들과 홋카이도의 아이누 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킨 방법을 대만에 적용했고 그것을 그 다음에 조선에 적용시켰다. 유사점은 일본어 학습을 장려 혹은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성을 말살하는데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제는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정책으로부터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그 결과 동화정책, 민족성 말살 정책, 그리고 내지연장주의정책 등을 채용한 것이다.

일본인과 조선인 내지 대만인의 결혼을 장려한 일제의 결혼장려정책은 프랑스의 동화정책을 채용한 사례다. 그런 면에서 일제는 식민학자들을 하여금 서양각국의 식민지정책을 연구하게 했고 그 정책을 참고로 하면서 일본의 독자적인 식민지 정책을 만들어 나간 것이다.

잡거정책, 교육정책, 동화이데올로기 창출 등은 모두 일제를 중심으로 하는 각 민족의 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었다.

이렇게 하여 일제는 유구, 홋카이도, 대만, 조선 등지에서 실시한 식민지정책을 마지막에 만주국과 태평양전쟁의 점령지들에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일제는 만주국 이전의 일제의 식민지 내지 점령지에 대해서는 모두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이라고 강변하여 ‘일본에는 식민지가 없다’를 폄하하는데 이 논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당시 1918년 미국 윌슨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결’ 원칙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였다. 그러므로 일제는 언젠가는 유구와 홋카이도처럼 조선과 대만에 대해서도 완벽히 내지

연장주의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었다.

한편 만주국에 대해서는 처음은 자치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부의를 황제로 삼았고 ‘왕도주의’를 그 국가이념으로 삼았다. 또한 동화이념이 아닌 ‘오족협화’, ‘민족협화’ 이념으로 다섯 민족이 어울리는 나라를 만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그런 다섯 민족의 중심은 일제였다. 이 만주국 건국 이후 일본은 동화이념을 ‘협화이념’으로 발전시켜 당면의 목표로 ‘협화’ 즉 일제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각 민족들 간의 ‘협력과 화합’이라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것이 결국 대동아공영권의 이념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하여 소위 ‘만주국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방식은 일제가 점령한 지역에 먼저 민족의 자치를 허용하여 그 다음 단계로 일본의 코쿠타이 이념을 주입시키는 ‘2단계논리’의 적용이었다. 때가 와서 만주국의 이념을 ‘왕도주의’로부터 ‘황도주의’로 바꾸고 그 후에 만주 각지에 신사가 건립된 사실이 그런 일본의 ‘2단계 점령논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보수진영의 일부가 현재도 태평양전쟁을 ‘백인지배로부터 아시아민족을 해방시킨 해방전쟁이었다’라고 강변하여 그 예로서 구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세력을 추방하여 인도네시아의 자치를 실현시킨 사례를 들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2단계점령논리’의 1단계에 해당되며 일제가 패망했기 때문에 2단계로 가지 못했던 사례들에 불과하다. 일제의 ‘2단계점령논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2단계혁명론’과 유사하다.

#### <현재적 함의>

일제는 동화이념을 중시하여 특히 조선에서는 역사교육을 중심으로 일본민족과 조선민족이 태고로부터 동일한 민족이었다는 ‘일선동조론’을 만들어냈다. 이런 사례는 현재 일본의 역사왜곡의 근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거를 찾아 논리를 구축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제시대 일제는 점령지의 각 민족을 지배하여 나아가 일본으로 동화시키기 위한 각종 동화이념을 만들어냈다. 일본의 주요대학에서는 식민학을 장려하여 점령지 지배에 관한 각종 논리를 만들어냈다.

현재도 일본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현 상황에 어긋나지 않는 논리를 도출하여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이상주의적인 소위 ‘진리’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면이 강하다. 그리고 일본이 구축하는 이념이나 논리의 기준은 서양 선진국의 선례나 경향에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례를 중시하는 경향이 일본에서 강하다. 선례를 연구하여 일본의 경우에 적용해 일본식 논리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18년까지 일제는 서양선진국들을 따라 해외 점령지 및 식민지를 만들어내었고 그들에 대한 통치방법도 서양선진국들의 선례를 연구해 결정해 나갔다. 그러나 1918년 이후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 성명을 계기로 세계가 식민지에 대한 억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일제는 점령지에 대한 통치방식과

이념을 수정해 나갔다.

그런데 이런 수정작업 속에서 일제의 한계가 드러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제는 이념이나 논리적 수정작업을 할 때 그때까지의 오래된 이념이나 논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념과 논리 속에 앞의 것들을 모두 포함시켜 계속 정당화해 나간다. 이 때 만들어진 새로운 논리에서 볼 때 과거의 논리의 한계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일제는 두 가지 논리를 억지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논리적 모순이 분출될 수밖에 없다.

1918년의 민족자결 원칙과 위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조선과 대만에 대한 자치나 독립을 허용할 수 없었던 일제는 ‘조선과 대만은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억지주장을 내세운 것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015년 9월18일 미명에 일본국회는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안보법제를 강행처리했다. 현 일본헌법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거의 모든 일본 헌법학자들의 의견이지만 아베 일본 정부는 일본이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즉 일본의 국익이 되는 현 상황을 만든다는 실용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정적으로 발동시킨다면 현 헌법 하에서도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은 합헌이라는 억지논리를 구축했다. 이런 사례도 일본이 실용적인 이념 수정에 있어서 논리적 연결성을 지키는데 한계를 노출시키고 모순이 생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괴뢰 만주국을 출범시키면서 ‘민족자결’ 원칙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제는 ‘민족협화’, ‘오족협화’ 이념을 새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일제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일제중심의 아시아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오래된 논리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논리에 포함시켜 정당화시킨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속성 때문에 일본이 현재도 서양의 논리와 사례들을 따라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의 침략논리를 청산하지 못하여 정당화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시대의 일어교육이나 동화정책의 영향은 현 일본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있다. 일본은 외무성과 각국의 일본문화원을 통해 일본어와 일본문화의 해외 보급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다. 일본 내 대학에 해외 대학생들을 다수 유치해 장래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인재가 되도록 많은 원조를 하는 것도 그 한 사례다. 매년 각국에서 전략적으로 일본 문과성의 특별장학생을 선발하여 우수한 인재를 일본에 유학시킴으로써 역시 장래적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인재배출에 노력하는 것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다. 현재적인 합의 부분은 앞으로 보다 깊고 넓은 연구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